

### 자신감 가지기 3. 다른 나라도 좋은 교육 정책을 찾아 헤매고 있다.

"미국 교육부 장관은 안 바뀌는 데, 한국 교육부 장관은 매년 바뀐다." 매해 바뀌는 입시 제도, 바뀌 보았자 효과는커녕 혼란만 더 초래한다는 개혁방안, 우왕좌왕 한다는 한국 교육 정책을 비판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말입니다. 매우 재치 있고 효과적인 비교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외국에서는 개혁을 잘 시도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안절부절하고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미국 교육부 장관은 장기 집권한다는 말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1999년 초부터 오늘까지 한국 교육부 장관은 6번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미국 교육부 장관은 올해초에 단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정권 교체로 인한 바뀔이었지요. 그러나 장관의 임기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교육 정책을 연방 정부 교육부 장관이 주도하지 않습니다. 연방정부는 미국 전체 공교육 예산의 6%만 지원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주(州)정부와 지역자치단체(school district)에서 조달합니다.

그러므로 미국 교육 정책은 누가 연방 정부 교육부 장관이며,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가와 무관합니다. 그 대신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선출하는 지역별 교육최고담당자(school superintendent)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교육부 장관의 비교 대상은 미국 연방 정부 교육부 장관이 아니고 지역별 교육최고담당자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과연 미국의 교육최고담당자는 한국의 경우와 달리 장기 집권할까요? 아닙니다. 미국의 교육최고담당자는 한국의 교육부 장관처럼 자주 바뀝니다. 뉴욕의 경우 지난 11년 동안 교육최고담당자가 10번이나 바뀐 사실은 한국에서는 잘 모르고 있지요. 뉴욕뿐만 아니라 뉴욕과 비슷하게 거대한 집단을 이룬 지역자치단체는 한결같이 거의 매해 교육최고담당자가 바뀌지고 있습니다.

이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식 기반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무척 커졌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할만한 교육 정책을 세우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담당자의 단명은 교육 정책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이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산업화시대에는 교육의 목표가 단순했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던 시대에 공교육은 일단 밥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가진 것이 별로 없던 산업화시대의 공교육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의 평등"(평준화)이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교육으로 궁극적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굶어죽는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학교공부를 싫던 좋던 해야하는 절박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평생"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18세까지만 "죽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해야합니다.

단기전을 위한 요령과 눈치작전은 필요 없고 장기전을 치르기 위한 안목과 생존전략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목표가 달라지면 교육 정책(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구시대는 어린이가 교육 대상이며, 단기 목적 달성을 위한 대량생산체제 교육을 획일적(효율적)으로 밀고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식기반시대에는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국민모두가 교육 대상이며, 직업위주라는 단기 목적과 평생교육이라는 장기 목적을 두루 달성해야 하며, 소량 다품종 교육체제를 유도해 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결과의 평등" 대신 "결과의 다양화"를 유도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에 부딪치게 됩니다. "결과의 다양화"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선자를 유도하되 후자를 다스리는 교육 정책은 가능할 뿐만 아니고 지식기반사회에 접어들기 위해 필히 이행해야 합니다.

밀어 부치는 정책은 쉽습니다. 자발적으로 따라오도록 유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율화를 존중해야하는 새시대 교육 정책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기반사회로 변신하려는 모든 나라가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못났기 때문에 우리 한국만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왜곡된 인식은 하루 빨리 버려야 합니다.